

“촛불시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

文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소감으로 밝혀… “촛불 들었던 국민들께 상 바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계시민상(Global Citizen Awards) 수상 소감으로 “나는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시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이었고, 노동·인권변호사였으며,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나는 촛불정신을 계승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대통령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다”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전문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관하는 올해 세계시민상을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과 공동 수상했다. 2010년 제정된 세계시민상은 대서양 연안 국가 관계 증진에 역할을 발휘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글로벌 리더들에게 주어진다. 아틀랜틱 카운슬은 문 대통령에 대해 “적폐를 근절하는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핵 위기 대응과 일찌리 찰출을 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 가처럼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로 이어지는 고난한 역사를 이겨냈다”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나는 세계적으로 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프리드 해양·항공·우주 박물관 시상식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로부터 대서양평의회 세계시민상을 받은 후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받은 우리 국민들의 성취가, 내가 오늘 우리 국민을 대표해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수의 저항에서 다수의 참여로 도약한 한국 민주주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기도 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독재의 벽을 무너뜨린 우리 국민은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힘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관련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진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다”면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줬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된 나에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었다”면서 “나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는 다시 다짐한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해

나갈 것이다. 나와 우리 국민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나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한민국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받는 상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라는 세계인들의 격려와 응원도 담겨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평화의 역사를 말씀드릴 시간이 올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끝맺었다. /뉴시스

5·18 특조위, 국민 제보 접수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는 20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공개제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의 조사자료, 국방부 자료, 현재까지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제보접수는 국방부 주관 조사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 범국민적으로 진상규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보접수 대상은 5·18 당시 시민·의료인·복무군인 등이며 내용은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해나 목격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헬기사격에 직·간접적 관여, 전투기에 무장한 채 출격대기 목격, 전투기 출격대기 간접적 관여 사실, 관련자료 보관 등도 포함된다.

관련 제보는 국방부 5·18특조위나 광주광역시에서 전화(02-748-0974~7)·이메일(uk8900752@mnd.go.kr)·팩스로 받는다.

5·18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범국민적 공개 제보 접수가 5·18관련단체와 광주시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참여는 물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명수 표결… 민주당, 야당 설득 총력전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위해 야당 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재운경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재 원내대변인은 “백혜련 대변인이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해 정말 꼭 필요하고 최상의 후보자임을 설명했다”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총력을 다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인준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 적극 설득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고 결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상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내일 상정이 돼서 (임명동의안인) 공식 처리 되도록 민주당 121명 의원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야당 설득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총력대응을 하겠다”며 “의원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 한명이라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설득하게 느끼는 것을 듣고 제대로 관계를 맺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 의원,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미 1대1로 (설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보통 당내에서도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당내 비토가 전혀 없다”며 “김 후보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각자 설득할 야당 의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해 원내지도부에 제출하는 등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원내지도부 역시 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 개별 접촉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이수 후보자 때는 당연히 국민의당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다소 나이브한 믿음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전화 한번 하는 것 말고 직접 만나서 깊게 소통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민주당 정발위, ‘권리당원 권한 강화안’ 발표

장기당원에 추가 권한 부여·전당원투표제 도입… ‘기초협의회’ 도입은 ‘이견’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0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은·김경수·박경미 의원, 여선웅·한민수 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의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언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 기준을 완화해 당원의 감시 권한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당비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한 당원은 향후 전당대회나 당내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발위는 ‘병

생당원’으로 이름을 정하려 했으나 최고위 내 이견이 있어 명칭은 새로 정하기로 했다. 추가 권한 인정 시점은 당원 가입 5년~1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와 함께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면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토록 하는 ‘전당원투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자발적

권리당원의 동아리 모임인 가칭 ‘기초협의회’ 제도 도입은 최고위 내부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정발위는 기초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초협의회는 가령 축구를 좋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은 ‘축구 기초협의회’로, 영화를 좋아하는 당원은 ‘영화 기초협의회’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발위는 지난 8일에도 기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최고위에서 일부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견이 표출돼 무산된 바 있다. 기초협의회 명칭 역시 새로 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